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36
----------	------

발의연월일 : 2021. 1. 21.

발 의 자 : 이용우 · 홍정민 · 박완주
진성준 · 민형배 · 윤준병
유동수 · 윤재갑 · 송영길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치명령 남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구체화(긴급성·명확성 추가)하고 대상에 임원(업무집행지시자 포함)까지 포함시키고 제416조 각호의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6조 및 제4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투자업자에게”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6조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제4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u>금융투자업자에</u>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 ----- ----- ----- ----- -----
1. ~ 8. (생략) <u><신설></u>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
전
3.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
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
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
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
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
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
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
한

<p><신 설></p> <p><신 설></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62. (생략)</p> <p><신 설></p> <p>63. (생략)</p>	<p>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p> <p>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p> <p>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6조(벌칙) ----- ----- ----- -----.</p> <p>1. ~ 62. (현행과 같음)</p> <p>62의2. 제4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3. (현행과 같음)</p>
--	--